

# 尹 “물가포함 민생안정대책, 새정부 최우선 과제”

## 尹, 경제분과로부터 물가동향 등 보고 받아 인수위 “정부에 유류세 30% 추가 인하 촉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물가를 포함해 민생 안정을 새정부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2 분과로부터 물가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보고는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물가 상승 영향이 민생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경호 간사, 최상목 경제1간사, 이창양 경제2간사는 3월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를 상회한 원인과 배경 그리고 국민

에게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당선인에 상세히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올 상반기 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지표와 물가전망이 어둡다는 보고를 받고 어려운 대내외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새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물가를 포함해 현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유류세 30% 추가 인하 조치를 포함해 현 정부에 요청했던 특단의 서민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또 “전기요금, 가스요

금 등 공공요금을 비롯해 뭔가 꼭 눌러 있는 느낌들을 인수위원들이 받고 있다”며 “이런 요인들이 한꺼번에 폭발했을 경우 현재 경제 상황 뿐 아니라 어두운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여 만에 4%까지 치솟는 등 고(高)물가가 곧 출범할 새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이같은 고물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과 관련한 변수로도 부상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손실보상 체계가 산정되면 지금이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흉남기 부총리에게 수차례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당에서도 (요청)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만들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현실적으로 (추경 편성이) 새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가지 분명한 원칙은 최우선 과제로 추경을 편성해서 손실보상이 빨리 될 수 있게 한다”면서도 “10년 만에 처음 4%를 넘긴 물가가 변수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상황과 거시경제가 심상치 않아 하반기 지표 전망이 좋지 않다”며 “당선인과 인수위가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는 공공요금에 대한 내용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위 관계자는 “보고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다”며 “서민 물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눌러놓은 전기·가스·통행요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 국방부 순차적 이사에...尹인수위 “밤 새서라도 이전”

### 국방부, 오늘 업체 계약...단계적 이사 방침

정부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방부가 본격적으로 이사 작업을 시작한다. 다만 국방부가 순차적 이사를 예고한 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예정대로 입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이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계약 체결 후 국방부 지휘 부서와 합동참모본부를 제외한 기관과 부서들을 순차적으로 옮기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내 지휘 부서와 합참은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이후에 이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 본관을 비우는 일정이 늦춰져 윤 당선인이 취임일인 다음달 10일 이후에도 한동안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집무를 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자 인수위 쪽에서 반박이 나왔다. 윤 당선인이 애초 의도했던 대로 다음달 10일부터 국방부 본관 건물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전 관련 예비비는 청와대가 해주시는 거니까 잘 될 거라고 믿는 거고, 지급해주시면 밤을 새서라도 이

전 (작업)해서 5월10일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는 자칫 국방부에 밤샘 이전 작업을 하라는 의미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본관 핵심 장소에 있는 장·차관실, 기획조정실장실, 국방정책실장실 등 지휘부와 작전·대비태세 부서는 한미 연합 지휘소 연습이 끝나는 오는 28일까지 사무실을 옮기지 않는다. 연습이 종료된 이후에야 이들 조직은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옮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인수위가 국방부에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 전까지 무조건 이사를 완료하라는 지침을 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그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상 문제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집무실 이전 여부를 둘러싸고 충돌했던 윤 당선인 측과 국방부가 이사 일정을 둘러싸고 재차 파열음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자 인수위 쪽에서 반박이 나왔다. 윤 당선인이 애초 의도했던 대로 다음달 10일부터 국방부 본관 건물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전 관련 예비비는 청와대가 해주시는 거니까 잘 될 거라고 믿는 거고, 지급해주시면 밤을 새서라도 이전 (작업)해서 5월10일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는 자칫 국방부에 밤샘 이전 작업을 하라는 의미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본관 핵심 장소에 있는 장·차관실, 기획조정실장실, 국방정책실장실 등 지휘부와 작전·대비태세 부서는 한미 연합 지휘소 연습이 끝나는 오는 28일까지 사무실을 옮기지 않는다. 연습이 종료된 이후에야 이들 조직은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옮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인수위가 국방부에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 전까지 무조건 이사를 완료하라는 지침을 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 “반려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 보장”

###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안에 반영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고통을 동반한 동물 안락사를 근절하고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또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전망이다.

아울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

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동물보호센터에서 개농장이나 번식업자 등에게 재위탁되어 식용 개로 판매되거나 번식 등에 악용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소 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하며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게 “유기·유실된 동물들의 입양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분양 공고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등 관리·감독에 특별한 주의를 해줄 것과 반려동물 존중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답변하며 동물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세부실천 방안 마련 등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